<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(2015~2019)>

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

(요 약)

- 안전한 일터, 건강한 근로자,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현 -

2015. 1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순 서

Ⅰ. 수립 배경 ····· 1

Ⅱ. 수립 경과 ····· 1

Ⅲ. 혁신의 필요성 ····· 2

1.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 ·····2

2.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 ·····3

3.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 ·····4

Ⅳ. 혁신 비전 ····· 5

Ⅴ. 혁신 전략 과제 ·····6

1.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·····6

2.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·····9

3.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·····10

4.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·····11

Ⅰ. 수립 배경

○ 그간 각종 안전보건 대책(산재예방 5개년 계획, 중대재해예방대책 등)의 마련·시행으로 **재해율** 지표는 **꾸준히 개선**되고 있는 **추세**

- 하지만, **사망사고만인율***은 **선진국 보다 2~4배 가량 높고, 경제적 손실액****도 **19조원**에 달하고 있음

* 사고사망만인율(‰)은 한국 0.78('10년), 일본('10) 0.22, 미국('10) 0.38, 독일('10) 0.18

* 경제적 손실액 : 12조 1088억원('03) → 17조 3159억원('09) → 18조 9772억원('13)
↳ 직접손실액(산재보상금) + 간접손실액(복구비, 생산손실비, 재해자 시간손실 등)

○ **단기적 성과**중심의 **경영** 확산으로 **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**가 안착되지 못하고,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

- 대기업(원청)에서 소규모 사업장(하청)으로 아웃소싱 확대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심화로 이로 인한 산재가 다발

○ 현장과 괴리된 법제, 대증요법식 감독,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**안전보건 환경 변화**에 **주도적 대응 곤란한 실정**

- **국민적 관심**과 **노사의 인식**을 충실히 **반영**하여 기존 **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**을 **획기적**으로 **전환**시킬 필요

Ⅱ. 수립 경과

○ **(방향 설정, 3~8월)** 안전보건 환경 및 산재통계 분석, 정책자문위원회(5.29), 안전보건포럼(3.13, 5.7, 6.26)을 통한 노사, 전문가, 현장 의견 청취

○ **(과제 발굴, 8~10월)** 검토위원회 구성*·운영(회의 6회 개최),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집중 토의 및 초안 마련

* 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가,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등 20명

○ **(의견 수렴, 11~12월)** 노사·전문가(11.20), 노사정위원회(11.25), 관계부처(10.16, 11.27), 주요기업 안전담당자(12.4), 안전보건전문위원(12.9),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위원회(12.26)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

Ⅲ. 혁신의 필요성

1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

<1> 환경 변화

○ **(산업구조의 변화)** '90년대부터 **서비스업의 비중**이 **지속**적으로 **증가,**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, 건설업은 10%내외를 유지

○ **(생산방식의 변화) 유해·위험업무 작업**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**아웃소싱이 일반화**되는 추세

○ **(저출산·고령화)**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한 **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** 등 노동력의 양적·질적 문제 심화

<2> 취약 계층의 증가

○ **(고령 및 여성 근로자)** 인구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로 고령층 취업자와 여성근로자 비중이 지속 증가

* 여성 경제활동 참가비율(통계청 경활조사) : '63년 37% → '13년 50%

○ **(외국인 근로자)** 국내 체류 외국인은 '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신규 외국인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

○ **(소규모사업장 근로자)** 50인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('01년 486만명 46% → '13년 875만명 57%)

<3> 근로자의 이동성 증가와 재해요인 다양화

○ **(직장 이동성 증가)**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('14.8월 604만명)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높은 비중(38%, OECD 회원국중 최고)

○ **(재해요인의 확대) 새로운 기계·기구, 화학물질** 등의 **증가와** 직무스트레스, 직업성암, 생식독성 등 **다양한 산업보건 문제가 사회 이슈화**

2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

<1> 안전보건 질서 형성 미흡

○ **(불명확한 기업 책임)** 대기업(원청)이 하도급 생산 방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(하청)으로 안전보건책임이 전가되어 사각지대 확대

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곤란한 상황

○ **(근로자의 역할 부족)** 안전보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굴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 부족

-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도 기제가 미흡,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시 제재가 확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<2> 정책의 대응성 약화

○ **(환경변화 대응 미흡)**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제도와 정책 접근 유지

* 감정노동, 직무스트레스, 신규 화학물질, 장시간 근로, 잘못된 근로자세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미비

○ **(결과중심 대응)** 안전보건 감독 및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선정 시 과거 산재발생 이력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산재예방 효과 저하

* 사업장 감독기준 :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

○ **(보건분야 관심 부족)** 근로자 건강관련 사항은 피해사항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인력, 예산 투입 등 정책적 관심 부족

* (예산) 안전분야가 보건분야보다 약 3배 많음, (인력) 지방관서·공단의 경우 안전분야가 보건분야 보다 약 2.5배 많음

3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

<1> 정부와 시장의 비효율성

○ **(복잡한 규율체계)** 방대한 조문(1100여개), 난해한 전문용어(기계, 설비, 작업, 화학물질 등) 등으로 수규자의 이해 곤란과 준수가능성 저하

○ **(비체계적인 정보·지식)** 각종 사업장 정보(위험기계기구, 사용 화학물질, 점검·감독 결과 등)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미흡

○ **(활력없는 시장)**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부족, 질낮은 안전보건서비스 선호로 시장 위축 경향

<2> 안전보건 문화의 미성숙

○ **(낮은 안전의식)** 노·사의 안전의식이 낮고 기업의 안전·보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진 상황

○ **(형식적 안전보건교육)** 이론 위주의 집체교육 중심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역량 형성에 미흡

<3> 거버넌스 구축 미흡

○ **(정부)** 생산중심 부처*와 안전중심 부처**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규율체계의 혼선 발생 및 안전보건시장 형성 미흡

* 산업부, 국토부, 기재부 등 ** 고용부, 국민안전처, 환경부 등

○ **(업종)**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일부 업종에서 구성 운영중이나 대기업 위주의 참여로 대 중소기업간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미흡

○ **(지역)** 국가·지역·농공산업단지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미구축으로 안전보건정책의 효과성 저하

○ **(공공부문)** 중앙(고용부, 산업부, 국토부 등), 지방(고용부 지방관서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(안전공단, 토지공사, 전력공사 등) 부문별 산재예방 협의채널 미비

Ⅳ. 혁신 비전 및 추진 전략

비전	**안전한 일터, 건강한 근로자, 행복한 대한민국**
목표	**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** * 사고사망만인율 13년 0.71‰ → 19년 0.3‰대 * 중상해재해율(휴업 90일 이상) 12년 0.26% → 19년 0.1%대
기본 방향	①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 강화를 통한 **안전보건 질서 확립** ② 인프라 확충과 대응 능력 보강을 통한 **안전보건정책 역량 강화** ③ 교육 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**실천중심**의 **안전보건 문화 확산**

추진 과제	안전보건 책임 명확화	○(**기업**) 안전보건 책임 확대 ○(**근로자**) 안전보건 참여와 역할 강화 ○(**정부**) 안전보건규율 확행 및 지원 효과성 제고 ○(**전문기관**) 안전보건 역할 재정립
	대응 능력 제고	○(**재해요인**)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관리체계 구축 ○(**취약계층**)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강화 ○(**미래대응**) 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 ○(**보건관리**) 근로자 건강관리체계 대폭 강화
	확고한 기반 구축	○(**법제**) 안전보건 규율체계 재구축 ○(**정보시스템**) 안전보건 지식·정보 기반 확충 ○(**산업**) 안전보건산업 육성 및 시장 형성 지원 ○(**협력체계**) 거버넌스 구축 및 동반성장 여건 조성
	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	○(**안전교육**) 교육유인 확대와 맞춤형 교육 강화 ○(**안전문화**) 컨텐츠 다양화와 실천분위기 확산

V. 혁신 전략 과제

1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

<1>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

1 사업주의 책임 강화

○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

○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* 강화

* 도급 인가대상 확대(작업방법의 위험성, 사용물질 유해성 등 고려), 인가기간 설정(3년마다 재인가), 재인가 심사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강화

○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,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기를 연장하도록 의무화

2 특성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

○ 고위험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외부 위탁 및 안전·보건관리자의 겸직 제한 추진, 안전·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

*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연구를 거쳐 제한 업종범위 등 결정

○ 중규모(50~299인)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안전·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(임금인상분의 50%(월 최대 60만원)를 1년간 지원)

○ 소규모(50인 미만)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(사업장의 직·반장이 안전보건업무 수행)

3 기업의 투자 확대

○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재해감소 정도,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변화 등을 통한 효과성 측정 모형 개발

○ 안전보건투자 금액,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, 산재예방 활동 내역,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

*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여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

<2>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

1 근로자 참여 제도 확대

○ 현장의 재해요인, 사업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공익신고제도 활성화

○ 작업유형별,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(유해위험성 인지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)

2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

○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 부여,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 확행

○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현장 안전보건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

<3> 정부의 정책효과성 제고

1 사업장 감독 내실화

○ 정기적이며 획일적인 감독을 지양하고 사망사고 다발작업 및 원인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*을 선정・집중감독

* ▲제조업(정비작업중 기계 끼임, 하역운반기계 부딪힘, 용접 중 화재・폭발)
▲건설업(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, 터파기작업 중 붕괴, 크레인 등의 넘어짐)
▲직업건강(밀폐공간 질식,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, 독성물질 급성중독)

○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

*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는 약 6,900개소로 현장집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

2 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확충

○ 예방사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 예산 증액,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

○ 기업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클린, 융자, 안전투자펀드 등 재정 지원책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재해요인 개선 집중 지원

<4> 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

1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정립

○ 클린, 융자사업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는 민간에 이관하고 여유 역량을 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, 기술지도에 집중

○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·보건서비스가 적절히 제공하는지 평가·피드백·관리하는 재해예방기관의 HUB 역할 수행

○ 新 기술에 대한 연구, 실용화를 지원하여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유도

* ICT를 활용한 센서류, 첨단소재 보호 장구류,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

○ 기업에서의 안전·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안전산업 구축

2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역량 강화

○ 재해예방기관의 경우 기술지도 및 사업장관리 충실성, 직원 전문성, 재해감소 실적 등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능력 평가하고 차등관리

○ 측정기관(작업환경측정, 석면조사 등)의 경우 인력·시설·장비 보유 현황, 부실측정여부 등 업무실적을 종합하여 평가

* 부실측정(조사)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, 특정자 자격정지,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측정(조사)명령 확행

○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 개선

* 직원 교육실적을 재해예방기관 평가시 반영

○ 현행 안전·보건관리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종합적인 진단·평가도 가능하도록 기관의 역량 제고

○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퇴직자 그룹을 활용한 안전·보건 컨설팅 사업 참여 등 고용창출 지원

2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

<1>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○ (제조) 안전 인증 및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·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 구축,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

○ (건설)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클린사업 지원(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) 확대, 초고층 건축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침 정비

<2> 대상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 강화

○ (신규근로자) 지식, 기능 및 태도로 나눠 체계적 교육 실시, 설립 1년 미만 사업장을 대상 안전보건 진단 및 종합패키지 지원

○ (장년) 4대(정리 · 정돈 · 청소 · 청결) 실천운동 실시, 신체 특성(근력, 시력, 청력 저하, 순발력 저하 등)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

○ (여성) 3대 업종(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건물 등 종합관리업) 중심으로 매뉴얼 및 건강증진·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

<3> 안전보건 격차 해소

○ (업종) 사고 다발 5대 서비스 위험업종에 대한 재해유형별 중점관리, 안전보건기술지도, 복지부·경찰청 등 유관부처 협업 강화

○ (기업 규모)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, 안전보건교육, 클린, 융자 등 지원 확대

○ (근로자 여부) 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한 특수형태종사자 안전보건 지원 확대, 지자체의 자영업자 관련 DB 활용하여 안전보건 정보 제공

<4> 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

○ (근로자 건강 보호) 재직자 건강관리 협업체계 구축,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촉진, 연령별 안전보건 배려 확대

○ (新 재해요인 관리)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, 발암성·생식독성 물질 관리, 나노물질 관리체계 마련 등

3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

<1> 규율체계 재구축

○ 수규자의 법률 이해도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·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 선진화 추진

○ 법 적용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(all worker)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

<2> 지식·정보 기반 확충

○ 업종, 규모, 근로자 특성(근속연수, 연령, 성별 등), 유해요인 특성(위험기계·기구, 화학물질 등)에 따른 재해 현황 등 산재통계 분석·활용

○ 산업구조 개편,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新 유해·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예방대책 수립

○ 지도·감독 실적, 각종 측정·검진 결과, 위험기계기구·화학물질 근로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관리

○ 고용부 안전공단 복지공단 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
<3> 안전보건 산업 육성 지원

○ 보호구 생산 등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 확대(중기청, 산업부 등과 협업)

○ 안전보건 관련 대학의 확충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

<4>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

○ 업종·산단·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 확충, 주요 대기업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개발, 공공부문 안전보건리더십 보강

4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

<1> 교육 내실화

○ **(제도 개선)** 실습 사례교육, 집체교육, 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제도 전면 개편*

* 개편 방향 : ① 이론 위주 교육 → 실습·사례(체험) 위주 교육으로 변경 ② 인터넷 교육 또는 집체교육 → 집체교육 일정부문 의무화 ③ 정기교육 시 단시간교육(tool box meeting 등) 인정 ④ 집체(이론)교육과 현장(업종별, 직종별)교육 병행

○ **(대상)** 사업장의 각 계층(경영자·관리자·현장감독자·근로자), 발주 기관과 예비산업인력*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

* 고등학교('13년) 안전보건교과서 제작 완료 → 서울 한양공고 등에서 시범 운영 중

○ **(인프라)** 산업별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, 안전체험관 확충, 사고 다발 고위험 업종별 재해사례 전파 등

<2> 실천 공감대 형성

○ **(안전수칙 준수)**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* 준수를 위한 全 사회적 캠페인 추진

* 보호구 착용, 안전보건표지 부착, 안전보건교육 실시, 안전작업절차 지키기

○ **(컨텐츠 다양화)** 애니메이션, PPL(Product Placement), SNS, 게임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심 제고 및 실천 유도

○ **(산재은폐 근절)** 노사정 공동 대책 수립, 노사단체 중심의 산재은폐 근절 캠페인 추진

○ **(실천 분위기 확산)**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,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, 현장방문, 각종 산재예방 행사 및 캠페인 등 추진

○ **(지역 밀착)**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시 지역별 안전보건 관련 의제 논의를 통해 현장 중심적 실천 분위기 확산

참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비교

1 안전보건정책의 현실적합성 제고

□ (현재)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효과성 저하

○ 산업구조의 변화, 생산방식의 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**안전보건 환경변화**에 대한 **수동적 대응**

○ 백화점식 정책, 정부의 **정책의 초점 불명확**으로 기업, 근로자, 전문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의 **안전보건 시너지 효과 저하**

□ (미래) 산업현장 밀착형 안전보건정책 추진

○ **환경변화**에 대해 지속적 조사·분석, **선제적 대응**을 위한 **정책 대안 적시 마련**

○ **정책목표를 명확화***를 통해 사업장 감독,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각종 예방사업 등 **정책역량**의 **결집** 도모

* 사고사망 및 중상해 이상의 재해(예시 휴업 90인 이상 재해) 감소

2 안전보건 참여 확대와 책임의 명확화

□ (현재) 기업 및 근로자 안전보건 인식 부족

○ **기업**의 **형식적 안전보건 관리**, **근로자**의 **수동적 자세** 및 **역할**로 인해 낮은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

○ 아웃소싱의 확대로 인한 **위험의 외주화**, **근로자의 이동성 증가** 등으로 **안전보건 책임**의 **불명확**

□ (미래) 안전보건주체별 책임 명확화

○ **기업**의 안전보건 **책임 명확화**, **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**과 **투자 확대**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제고

○ 안전보건 활동에 **근로자의 참여**를 **확대**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**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**

3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

□ (현재) 재해발생 결과 중심 대응 체계

○ 재해 원인에 대한 **선제적 대응 체계 미비에 따른** 기존 재해 발생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역량 집중으로 **정책의 효과성 저하**

* 재해 발생사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안전보건 정책역량이 집중 되는 경향

○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접근 부족으로 **중요 안전보건 이슈**가 **정책적 관심**에서 **벗어남**

* 서비스업, 소규모 사업장, 특수형태 종사자, 보건 이슈 등

□ (미래) 재해원인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

○ **재해원인 분석**을 기반으로 주요 다발 요소에 대한 집중 감독·기술지도,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**정책 효과성 제고**

○ 신기술 개발, 산업구조개편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**선제적 연구 기반 구축 및 정책 대안 마련**

4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과 문화 정착

□ (현재) 취약한 인프라와 낮은 안전의식

○ 형식화된 안전보건관련 법령, 단편적인 정보·지식, 부족한 협업체계 등으로 **안전보건 인프라가 전반적**으로 **취약**

○ 서류 중심의 기업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규정·절차와 실천의 괴리로 **안전문화 지체**

□ (미래) 내실있는 인프라 확충과 실천중심의 안전문화 확산

○ 기업, 근로자 등 수규자 중심의 쉬운 법체계로 개편, 통합 정보망 구축 등 **안전보건 인프라 확충**

○ 업종·산업단지·지역별 **리더십 확충** 및 실질적인 **협업체계 구축**, 안전보건 **실천분위기 형성**을 통한 **안전문화 확산**